

폭언·갑질...감정노동자 피해 여전

보호법 시행 3년...근로자들 "큰 차이 없어요"

비하 발언 상처 일상... "사회적 인식개선 필요"

상담원 등 이른바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 3년 동안 별다른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면서 법 제정 취지가 희박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선 현장 감정노동자들은 여전히 소비자 등으로부터 적·간접적 갑질을 받고 있지만, 별도의 보호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구체적이고 실질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6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국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감정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추가했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은 고객의 폭언·폭행 등으로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생기지 않도록 사업주가 예방조치를 하게 의무화한 조항이 추가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을 가리키는 말이다. 법에 제26조의2(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가 신설됐으며, 2018년 10월 18일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광주시와 각 자치구에서도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마련했다.

그러나 감정을 소모하며 일하는 근로자들의 정신적 피해를 막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와 보호 사업 등의 효과는 사실상 미비한 실정이다.

직장갑질 119와 사무금융설문조사 우분센터가 지난해 10월 콜센터 직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67.1%가 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

후에도 갑질이 줄어들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한 회사가 상담사를 보호하고 있다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변한 비율이 60%가 넘었다.

고객 응대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다.

실제 감정노동자들은 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근무환경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고충을 호소했다.

통신 및 보험사 상담사로 6년째 근무

중인 이 모씨(27)는 "법 시행 후 고객과 통화 전 보여주기로 넣는 안내 멘트만 추가됐을 뿐 별다른 조치는 없다"면서 "언어폭력이 2번 이상 이어져야만 상담을 조기종료할 수 있어 매주 폭언을 듣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백화점에서 근무하는 박모씨(25)도 "직원들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비하 발언을 일삼는 손님들은 여전히 많고 나는 이런 법안이 있는 줄도 몰랐다"며 "폭언을 듣고 기분이 나빠도 혼자 근무하니 자리를 비울 수 없어 불만이 있는 손님들로부터 회사의 방패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한 감정을 추스를 시간도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감정노동자들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선 상담 노동이 존

중받을 수 있도록 업무의 자율성 보장 등 노동환경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노무법인 지우 이주현 노무사는 "고객 응대근로자 보호법이 신설돼 운영되고 있지만 단지 형식적인 매뉴얼 제작과 표지 게시에만 그치고 있는 사업장들이 많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자들이 폭언으로 얻는 심적 고통은 분명한 '질병'임을 사측에서는 인지하고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객과의 분쟁 시 노동자를 질타해선 안되고 폭언을 당한 노동자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등 고객 응대 근로자의 처지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홍승현 기자



여수 선박서 화물 소독제 폭발

지난 14일 오후 1시 7분께 여수시 오동도 앞 해상에서 140t급 석유제품 운반선에 적재된 훈증제가 폭발해 선원 2명이 다쳤다. 해경은 화물을 소독할 때 쓰는 훈증제가 화학적 특성상 물과 접촉하면 고열이 발생하면서 폭발할 위험이 있어, 사고 선박을 신북항 부두로 옮겨 진화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사진은 연기 자욱한 석유제품 운반선. /연합뉴스

사건은 연기 자욱한 석유제품 운반선. /연합뉴스

전남도립대 "작지만 강한 대학 육성"

4개 학과 통폐합...입학정원도 195명 감축

전남도립대학교가 선제적 구조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립, 작지만 강한 대학으로 거듭난다.

도립대학교는 지방대학의 위기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경쟁력이 부족한 4개 학과를 통폐합하는 등 입학정원을 30%를 줄인 반면 지역 특성에 맞는 귀농귀촌학과를 신설한다고 16일 밝혔다.

전남도립대는 지난 11월부터 대학 구조개혁팀과 중장기 발전기획팀, 교육과정개발팀, 평가대비팀 등 4개 TF팀을 운영했다.

수차례 논의 과정을 통해 경쟁력이 부족하거나 미흡한 학과를 통폐합하는 구조조정을 통해 작지만 강한 대학 만들기ye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다.

교무위원회와 전체교수회의를 통해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2023학년도 학과 개편 및 입학정원 조정을 위한 학칙 제4조(설치학과 및 입학 정원)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경쟁력이 부족한 경찰경과, 유아교육과, 보건의료과, 산업디자인과 등 4개학과를 폐지하고, '헬니스키능 귀촌학과' 신설을 담고 있다.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보육과로 명칭을 변경기로 했다.

정원 조정과 관련해서는 현 입학정원을 645명에서 450명으로 195명(30%)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전남도의 협의와 교육부의 승인 과정을 거쳐진다.

전남도립대의 이번 구조조정은 지방 소멸시대에 인구의 자연감소와 더불어 지방 대학의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통해 작지만 강한 경쟁력 있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신설학과는 대학발전계획과 연계해 농어촌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확보하고, 귀농귀촌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남지역 특성에 맞는 학과개설이라는 TF팀 연구 결과를 반영했다. /김영민 기자

'투기' 정현복 광양시장 불구속 송치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 투기 의혹이 일었던 정현복 광양시장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16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지난 14일 도로가 개설될 곳에 부인 명의로 땅을 미리 사는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정 시장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과 농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정 시장의 부인 A씨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정 시장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진상면 금이리와 진월면 신구리를 잇는 군도 6호

선 도로 건설이 추진될 것을 미리 알고 2019년 8월 부인 A씨 명의로 땅(1,084㎡)을 구매해 혐의를 받고 있다.

광양시는 A씨가 토지를 사들인 이듬해인 2020년 4억원을 편성해 도로 개설에 나섰다.

경찰은 또 광양읍 칠성리 호복마을에 있는 정 시장의 땅에 2차선 도로가 난 것도 정 시장이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 지난 3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정 시장의 자택과 광양시청을 압수 수색하는 등 7개월간 수사를 벌였다. /최환준 기자

실습생 잠수시켜 숨지게 한 업체대표 7년 구형

현장실습생에게 따개비 제거를 위해 잠수를 시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구속기소된 요트 업체 대표에게 징역 7년 형이 구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요트업체 대표 A씨(49)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업체에 대해서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6일 오후 이순신마리나 요트장에서 현

장실습을 나온 특성화고교 3학년 홍정은군이 물에 빠져 숨진 데 대해 요트 업체 대표의 과실이 크다고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에게 잠수 작업을 지시하면서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는 등 A씨의 잘못이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금지된 잠수 작업을 시켰으며 2인 1조로 해야 하는 잠수작업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환준 기자

전남도, 난임 시술비 확대 횡수 무제한 최대 150만원

전남도는 저출생 대응 시책의 하나로 지난해부터 추진한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올해 확대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비를 회당 20만~150만 원을 연 2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소득과 횡수 제한 없이 시술비 회당 30만~15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 1년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 중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횡수 종료자다.

지난해 57명의 난임부부를 지원, 3명이 임신에 성공했다.

소득과 횡수 제한 없이 지원하는 올해는 더 많은 난임부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을 바라던 건강보험 적용 횡수 소진을 확인할 서류 등을 갖춰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도는 또 '한방 난임치료' 대상도 확대해 올해부터 소득 기준 제한 없이 지원키로 했다. /김영민 기자

고용지원금 허위신청 알선업자 실형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해 허위로 고용지원금을 타내도록 알선한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B씨(31)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과 공모해 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은 자영업자 13명과 구직자 1명도 각각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 등은 실제 함께 일한 적이 없는 사

람들이 근무하다가 휴직한 것처럼 꾸며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유지 지원금(유급휴직) 1억 6,000만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근로복지공단에 1억 2,700만원의 고용유지비용 대부분을 거짓으로 신청하고 각종 사회보험 지원료를 타낸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각종 국가보조금 심사 기준이 완화되고 신청자가 많아진 점을 악용했다. /최환준 기자

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 중급반]		상가매매(상무지구)	신축원룸매매(신축)
<p>1) 특수경매전문반 모집(선착순 8명) (유치권 전문, 법지)</p> <p>2) 직업 전문반모집(배우면서 돈버실분 환영) ① 기초반, ② 중급반, ③ 특수반 (기초부터 ~ 실전 ~ 특수까지)</p>		<p>중심상업지역 6층, 7층 (총분양 140평)</p> <p>시세 -> 9억</p> <p>급매가 -> 5억8천</p> <p>(보 3천, 월 350만, 용 3억5천)</p> <p>(사무실 리모델링함,빠,유홍,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p> <p>010-6670-9800</p>	<p>1개동 원룸 (상가)로 노후대비끝(공실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수익 750만 년수익 9000만 매가 13억5천 (보2천, 용 6억5) <p>★ 4개동(월수익 3000만) => 년수익 3억6천 매가 56억(보8천, 용25억)</p> <p>010-6670-9800</p>
광주	<p>서구 화정동(주택) ▶ 감정가 2억5천 -> 최저가 1억7천 (1/21)</p> <p>서구 쌍촌동(아파트) ▶ 감정가 1억7천 -> 최저가 1억1천 (1/27)</p> <p>광산구 수완동(근린상가) ▶ 감정가 95억 -> 최저가 66억 (2/3)</p> <p>북구 용봉동(다가구원룸) ▶ 감정가 8억3천 -> 최저가 2억9천 (2/3)</p> <p>광산구 수완동(근린상가) ▶ 감정가 8억1천 -> 최저가 5억6천 (2/3)</p> <p>서구 화정동(근린주택) ▶ 감정가 3억2천 -> 최저가 2억2천 (2/3)</p>		
전남	<p>광양시 성황동(임야) ▶ 감정가 18억 -> 최저가 5억1천 (1/10)</p> <p>목포시 옥암동(근린시설) ▶ 감정가 25억 -> 최저가 14억 (1/10)</p> <p>진도군 진도읍(근린시설) ▶ 감정가 32억 -> 최저가 22억 (1/10)</p> <p>담양군 월산면(임야) ▶ 감정가 9억7천 -> 최저가 3억5천 (1/20)</p> <p>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 감정가 2억1천 -> 최저가 6천1백 (1/27)</p> <p>나주시 금천면(주택) ▶ 감정가 4억1천 -> 최저가 2억9천 (2/3)</p>		
시외	<p>경남 창원시 의창구(근린상가) ▶ 감정가 40억 -> 13억 (1/13)</p> <p>서울 특별시 영등포구(근린시설) ▶ 감정가 64억 -> 최저가 32억 (1/25)</p>		